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에 나타난 중도주의와 시민적 공공성*

김 봉 곤**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요약】

본고는 해방 이후 원불교와 천도교에서 제시한, 건국론에 나타난 중도주의와 시민적 공공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오늘날 원불교와 천도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통일운동과 시민운동이 당시 정교동심(政敎同心)의 이념 하에 제출한 건국방략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산 송규에 의해서 작성된 원불교의 건국론은 건국사업에 필요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어 정치, 교육, 국방, 건설과 경제의 정책을 제시하고, 최후로 진화의 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열악한 민중의 정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분야에 뛰어난 자를 우대하고 세습법을 철폐하여 약자(弱者)에서 강자(强者)가 되는 진화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마음을 살피는 중도주의와 미국이나 소련 등 국가 간이나 관리와 민중, 자본가와 무산자 등이 중도주의의 입장에서 좌익, 우익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천도교는 인내천(人乃天)의 중지에 따라 인간이 진화상의 최정점에 있다고 파악하고, 낙원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민족개벽과 사회개벽을 주장하였다. 이에 천도교에서는 민족 자주적 이상적 민주국가의 건설과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신생활(新生活)에 기반한 경제체제의 실현,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에 맞는 새로운 윤리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천도교 역시 미국이나 소련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거나 좌, 우익에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중도주의 입장에서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도덕이 실현되는 신민주주의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 위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과제번호 : NRF-2016S1A5B8914400)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교수, kimbong21@hanmail.net

또한 원불교와 천도교에서는 건국론에서 시민적 공공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불교에서는 송규가 상호간에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폐단을 제시하여 시민적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박창기가 회중을 대상으로 공공성의 기초단위를 마련한 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정치의 바탕위에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정치와 공개정치를 통한 의사수렴방식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볼 때 원불교는 개인 간의 주체의 인정과 인격의 존중, 그리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해 가는 시민적 공공성의 원리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천도교에서는 인내천의 중지에 따라 사인여천의 윤리, 인간지상의 도덕, 평등 자유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누구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담당자를 선거하고 파면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였고, 봉건적 제 관계나 식민지적 성격, 친일 자본가와 지주 등의 반동적 파쇼 등을 타파하여 개인, 사회, 국가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원불교에서 주장한 중도주의 입장에서 계급 간에 화합을 꾀하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공론을 중시한 것은 오늘날 민족통일과 시민사회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천도교에서 계급대립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어 불합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것은 오늘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측면의 분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원불교, 천도교, 건국론, 중도주의, 시민적 공공성, 의사소통, 인내천.

1. 머리말

오늘날 근대한국종교인 원불교와 천도교에서는 생명, 평화, 통일운동을 비롯해서 여성, 인권운동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¹⁾ 원불교와 천도교의 사회참여는 새로운 개벽세상을 추구하는 종교적 특성에서 오는 것이지만, 오늘날 공산권의 붕괴로 이념 대립이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통일과 생명평화, 여성, 영성운동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8·15해방 이후 원불교와 천도교에서 제시한 건국론이 주목된다. 점차 좌·우익 대립이 극심하게 전개되는 속에서도 남북이 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통일과 새로운 사회와 국가 방략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제 해결에 있어서

1) 원불교의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박광수, 「원불교 사회참여운동의 전개양상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0(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08)을 참조할 것. 천도교에서도 1991년 5월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설립되었고, 2011. 10에는 한울연대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다.

원불교는 1945년 8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전채동포구호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945년 10월 중법사 정산 송규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론이 제시되었고, 천도교에서는 1945년 10월 부활한 천도교 정치결사체인 청우당(靑友黨)에 의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1947년 4월 천도교의 건국론이 제시되었다.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불교의 건국론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송규의 건국론이 1981년 원불교출판사에서 『건국론』으로 활자화되어 널리 알려지자²⁾ 20편이 넘는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1998년에는 정산종사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송규에 의해 작성된 프린트본 원본을 공개하였다.³⁾ 정치적으로 중도주의 노선과 평화통일론을 표방하였음과 개벽종교로서의 정교동심(正敎同心) 이념을 중시하였음이 주로 강조되었다.

천도교의 건국론에 관해서는 1998년 임형진, 2010년 정용서 등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적 신민주주의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에 관한 새로운 국가 틀을 제시하였음이 밝혀졌다.⁴⁾ 최근에는 임형진에 의해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에 간행된 「당지(黨志)」, 「천도교정치이념(天道敎政治理念)」, 「천도교청우당론(天道敎靑友黨論)」을 『천도교의 정치이념』이라는 책자로 재간행함으로써, 해방 후 천도교의 건국론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⁵⁾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해 원불교와 천도교의 해방 후 건국론에 관해서는 그 내용과 의의가 대부분 고찰되었다. 그러나 근대한국종교를 대표하는 두 종교 간의 건국론에 관한 비교검토나 시민적 공공성의 측면 등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해방 후 종교에서 중도주의 측면에서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도모하였던 것이나, 계급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마련하려던 여러 정책들은 오늘날 이들 종교의 통일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성격규정이나 의의, 방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을 검토한 다음, 중도주의의 입장에서 어떻게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새로운 정치, 사회를 모색하였는가, 또한 새로운

2) 양은용, 「정산종사의 저술과 관련연구 분석」 『평화통일과 정산종사건국론』(익산: 원불교출판사, 1998), 305쪽.

3) 정산종사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에는 1998년 김삼룡, 백낙청, 김용옥, 김기래, 황인관, 강만길, 김정호, 한종만, 김영두, 박상권, 박영학, 김도중, 양은용 등에 의해 발표된 논문 13편을 모아 『평화통일과 정산종사건국론』이라는 책자를 간행하고 책 말미에 건국론 초간본을 영인하였다(정산종사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익산: 원불교출판사, 1998. 11). 본고에서는 1998년 간행된 프린트본을 대본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4) 임형진, 「東學과 天道敎 靑友黨의 民族主義研究」(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8)

정용서, 「일제하 해방 후 천도교세력의 정치운동」(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0)

5) 김병제, 이돈화 외(임형진 편), 『천도교의 정치이념』(『동학네오클래식』12),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국가건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적 공공성을 실현하려고 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2.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

원불교의 건국론은 1945년 10월에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 송규에 의해 작성되었다. 8·15 이후 넘쳐나는 전재동포와 많은 문맹률, 그리고 식민지 국가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윤리와 시민사회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는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해방 당시 500만에 달했던 해외 한인 중 돌아온 사람은 300만 명 정도였고 돌아오지 않거나 못한 사람도 200만 명에 이른다.⁶⁾ 당시 1천 600-700만의 남한에 3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새롭게 편입되면서 남한사회는 생활난에 직면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구호가 해방정국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토지기반을 갖지 못했던 이들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드러냈다.⁷⁾ 원불교에서는 전재동포를 구제하기 위해 송규가 원의회의 동의를 얻어 1945년 9월 전재동포원호회를 조직하였고,⁸⁾ 이리에서는 13개월 반, 서울에서는 6개월 반, 전주에서 5개월, 부산에서도 여러 달에 걸쳐, 거의 80여 만 명의 전재동포를 구호하였다.⁹⁾

원불교에서는 이러한 전재동포 구호사업과 함께 문맹률을 줄이기 위한 한글교육 실시, 새로운 교육기관과 고아원 설립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¹⁰⁾ 이처럼 건국사업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원불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미군정을 비롯한 여러 정치, 사회단체와의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¹¹⁾ 새로운 국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필요가 제기되어, 1945년 10월 종법사인 송규에 의해 건국론이 저술되었던 것이다. 송규는 건국론을 저술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6) 장석흥, 「해방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 25(서울: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11쪽. : 해방 이후 일본에서 귀환한 사람은 140만 명, 만주에서 100여만 명, 중국대륙에서 10여만 명, 하와이, 대만, 오키나와 남태평양 군도에서 10만여 명이 귀환하였다. 그 밖의 지역은 귀환자체가 밝히지 않는 실정이다.

7) 위의 논문, 12쪽.

8)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전재동포구호사업의 재조명 I」 『원보』32(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89), 2쪽.

9) 원불교중앙총부, 『원기31년 사업보고서』(익산, 원불교중앙총부, 1946)

10) 신순철, 「건국론의 저술 배경과 성격」 『圓佛敎學』 4(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9), 507-508쪽.

11) 신순철, 위의 글, 507-508쪽.

8월 15일 이후로 여러 대표의 선언도 들었고, 그 지도방식도 보았으며, 인심의 변천 상태도 대개 관찰한 나머지, 어느 때는 혹 기뻐도 하고, 어느 때는 근심도 하며, 어느 때는 혹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자연 나게 되므로, 자연히 발로되는 그 생각 일면을 간단히 기술하고 이름을 「건국론」이라 하였다.¹²⁾

8·15해방 이후 여러 가지 국가론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그 잘잘못을 평가하고 나 새로운 「건국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어 송규는 건국론을 제시한 목적에 대해

건국이 있는 후에야 주의도 있고,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고, 이권도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 스스로 사용할 것이나, 만약 건국이 없는 때에는 주의와 평등과 이권을 그 누구에게 요구하겠는가.¹³⁾

라고 하여, 건국을 해야 주의나 평등, 이권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건국을 저술한 목적을 밝혔다. 이러한 송규의 건국론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은(四恩), 즉 천지은(天地恩), 부모은(父母恩), 동포은(同胞恩), 법률은(法律恩)을 통해 일원상의 대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법률은은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인도정의의의 공정한 법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¹⁴⁾ 올바른 법률의 제정과 그 실천을 통해 부모, 동포, 천지에까지 보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송규의 건국론은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이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동남풍과 서북풍, 자모와 엄부의 관계에 비유한 정교동심(政敎同心)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교동심은 종교는 종교의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 정치가 없어서는 안 됨을 이해하고 정치는 정치의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 종교가 역할되는 면을 이해해주는 상호 조화의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¹⁵⁾ 송규에게 있어서도 도치, 덕치를 표방하는 종교상의 교화의 기능과 정치를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¹⁶⁾

천도교에서도 원불교와 마찬가지로 정교동심의 정치사상을 반영한 건국론을 제시하였다. 일찍이 천도교를 이끌고 있었던 의암 손병희는 「명리전」에서 ‘교정쌍전(敎政雙全)’을 제창하여 권력의 도덕화와 도덕의 권력화를 추구하였다.¹⁷⁾ 이후 손병희는 문명

12) 『건국론』, 「제1장 서언」.

13) 『건국론』, 「제8장 결론」.

14)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 「사은(四恩)」.

15) 유병덕, 「소태산이 본 종교와 정치의 상관성」 『원불교사상』 2(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205-209쪽.

16) 김도중, 「정산종사의 정치철학」 『평화통일과 정산종사건국론』(익산: 원불교출판사, 1998), 283쪽.

17) 오문환, 「의암 손병희의 ‘교정쌍전’의 국가건설 사상 : 문명계몽, 민회운동, 3. 1독립운동」 『정치사상

운동, 민회운동, 3·1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며, 궁극적으로 민의 자각을 통한 새로운 국가건설과 독립된 자주국가를 추구하였다.¹⁸⁾

해방 이후 천도교의 건국론은 천도교의 정치조직인 청우당에서 제시하였다. 청우당은 1932년 2월 16일 천도교 청년당과 청년동맹이 합동하여 민족운동 단체로서 출범한 청우당이 일제의 회유정책에 의해 1932년 4월 분열되어 거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나, 해방이 되자 그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국가건설에 동참하기 위해 1945년 10월 31일 청우당이 결성되었다.¹⁹⁾ 북한에서도 1946년 2월 16일 재건되어 남북한 모두 청우당이 결성되었다.²⁰⁾ 바로 이 청우당에 의해서 1946년 「당지(黨志)」가 간행되어 물심일원((物心一元), 성신쌍전(性身雙全), 교정일치(敎政一致)를 강령으로 내세웠다.²¹⁾ 교정이 일치되어야 물질과 정신문화가 합일되고, 영과 육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반영한 국가건설의 방략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어 청우당에서는 「천도교정치이념(天道敎政治理念)」을 1947년 4월 5일 간행하였고, 「교정쌍전(敎政雙全)」, 「천도교청우당론(天道敎靑友黨論)」 등이 평양 등지에서 각각 간행되었다.²²⁾ 이 중에서 「천도교정치이념」은 1947년 5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한의 천도교 이론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거친 뒤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²³⁾ 당시 천도교의 건국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45년 10월 제시된 원불교의 건국론과 1947년 4월 제출된 천도교의 건국론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종교상의 치교병진의 방략을 담고 있다.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제(日帝)가 남긴 적산(敵産)은 국유화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하여 일치되는 점이 많으나, 제출된 시기의 차이와 좌, 우익의 대립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그 차이가 노정된다. 이를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10-2(서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60쪽.

18) 오문환, 위의 글, 82-83쪽.

19) 임형진, 「東學과 天道敎 靑友黨의 民族主義研究」(경희대학교박사논문, 1998), 117-119쪽.

20) 정용서, 앞의 논문, 176쪽.

21) 『천도교 정치이념』, 95쪽.

22) 정용서, 앞의 논문, 208쪽.

23) 김병제, 이돈화 외, 「천도교청우당론」, 『청우당의 정치이념』(『동학네오클래식』12)(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281쪽.

〈표 1〉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의 비교

구분 종교	목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원불교	정신개벽 국력배양	민주공화, 중립외교, 남녀평등	균평한 경제생활(농지의 평균제, 적산 및 주요산업 국영, 중소기업 민영)	계급화합, 인권 존중	의무교육 종교장려	치교병진
천도교	민족, 사회해방	민주공화, 중립외교, 남녀평등	동귀일체(토지 및 주요산 업은 국유, 중소기업은 민 영)	계급철폐, 인권존중	의무교육	교정쌍전 (도덕종교)

먼저 원불교의 건국론을 살펴보면, 정신으로써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으며, 국방, 건설, 경제로써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국력을 배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송규는 건국론의 방책에서 정신이 근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⁴⁾ 건국은 단결로서 토대를 삼아야 하는데, 단결은 흥중에 있는 장벽을 타파하여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이러한 마음의 단결에 이어 자력확립, 충의봉공, 통제명정(統制明正), 대국(大局) 관찰 등 5대 정신이 현재 건국의 주요 사항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실하여야 국가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5대 정신을 선전, 교육, 훈련 등 각 기관을 통하여 모든 대중들이 뼈속까지 깊이 뿌리박힌 국민성이 되게 하자고 하였다.²⁶⁾

이어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중도주의를 운용하고, 시 정을 간명하게 하며, 헌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자고 하였다. 교육에 대한 방책으로는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며, 중학과 전문대학을 확장하자고 하였다. 특히 학교는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므로 국립과 민립을 1대 2의 비율로 하여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세우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국방 대책으로는 자위의 국방정신을 고취하고 국방군을 창설하되, 규율을 엄하게 하여 본분을 지키게 하자고 하였고, 건설과 경제에 있어서는 전기공업의 증강, 지하자원 개발, 운수교통의 개수, 농지와 산림 개량, 주요산업의 국영화와 함께 각종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송규의 건국론은 실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민중들이 정신적으로 정치와 교육에 있어서 신의를 갖도록 한 다음, 국방, 건설, 경제를 실지화하여 자립, 자위, 자작, 자급의 터전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정치적으로 국민훈련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도, 군, 면, 리 등에서 애국정신과 공중도덕

24) 김영두, 앞의 글, 228쪽.

25) 김석근, 앞의 글, 29쪽.

26) 『건국론』, 「제2장 정신」.

을 주제로 수시로 명사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여 시폐(時弊)를 교정하고 인심을 진흥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종교 역시 정신통제와 양심배양의 힘을 기르도록 행정, 사업, 교육기관과 함께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치교병진을 하게하며, 교육에서도 애국정신과 공중도덕, 근로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신교육과 예의교육, 근로교육의 실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송규는 경제진흥과 생활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경제진흥을 위해서 전술한 여러 정책과 함께 노동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근로훈련법을 두어 누구나 근로의 정신을 갖게 하며, 죄수들이나 부녀자들의 노동 역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생활의 개선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선생활을 방지하며, 구역별로 위생보건 설비를 확충하고, 공익재단을 설치하며, 은행과 금융조합에서 저리자금을 융통해주고, 농지는 평균분작토록 하며, 고리대업을 금지하고 저금생활을 생활화 하자는 등 다방면에 걸쳐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 이래 원불교에서 실시한 경제자립운동과 생활개선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남긴 재산은 국유로 하되, 주택은 전재민 구호에 이용하되, 각 군과 면단위로 책임을 지고 주택과 취직 등을 알선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송규의 건국론이 전재민 구호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²⁷⁾

송규는 새로이 건설되는 국가는 낮은 상태에서 보다 높은 상태로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방도로는 1) 정치에 관한 공로자 우대 2) 도덕에 관한 공로자 우대 3) 사업에 관한 공로자 우대 4) 발명자 우대, 5) 특별기술자 우대, 6) 영재의 외학장려, 7) 연구원 설치, 8) 세습법 철폐 9) 상속법 제한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 도덕,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의 공로자를 우대하고, 영재를 유학시키고 연구원을 설치하여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의 정책을 모색하도록 하여, 국가가 진화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습법을 철폐하고 상속법을 제한하여, 개인의 잘잘못에 따라 대우를 받게 하여 국민의 정신개조와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상속을 인정하되 소자본에 그치게 함으로서 선업을 짓게 하고 국가사회발전과 생활정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이러한 진화의 길은 소태산 박중빈이 제시한 약자에서 강자가 되는 길로서 국가의 자주성의 회복이며, 물질과 정신의 개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원불교 정치사상의 극점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천도교의 건국론을 살펴보면, 천도교의 건국론은 인내천(人乃天)의 종지에 따라 평등자유의 제도와 인간지상의 도덕, 사인여천의 윤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²⁹⁾

27) 『건국론』, 「제3장 정치」, 「제4장 교육」, 「제5장 국방」, 「제6장 건설과 경제」 참조.

28) 『건국론』, 「제7장, 진화의 도」.

인내천의 종지에 대해 천도교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인간은 우주본체가 인격화된 천주의 조화적, 자율적 화생인 천지만물 가운데에서 본체의 전일적 성격을 품부한 객체이며,³⁰⁾ 사상적으로 인간은 진화상의 최정점에 있다고 이해한다.

천지만물은 일원적 우주친화력이 서행(徐行)한 자율적 조화에 의하여 지금의 우주와 같은 삼라만상을 낳은 것이므로 우주 진화는 전단계가 후단계보다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후단이 전단보다 비교적 완전한 것이며, 그리하여 인간은 우주 최후 단계에 생성한 동물인 고로 인간성 중에는 우주의 전 성격을 구비한 것이다.³¹⁾

라고 하여 인간은 우주 최후 단계의 진화상의 결실로서 우주의 완전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은 우주적 진화, 생물진화, 인간 진화를 거쳤기 때문에, 물리화학적 본능과 생명생리적 본능, 영성본능의 3대 본능을 구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소우주이며, 소분천(小分天)이며 신령의 아들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또한 이러한 인내천의 원리가 실현된 것이 인본사상과 사인여천의 윤리, 인간지상의 도덕, 여천합일(與天合一)의 종교, 평등자유의 제도이므로,³³⁾ 천도교의 건국론 역시 이러한 제도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민주정치는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인민이 통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인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민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에 의해 입법, 행정, 사법관을 뽑고 파면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서, 인민이 진정한 통치의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둘째 민주경제는 인민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있던 생산력 담당자(농민, 노동자, 기술자 등 근로층)가 생산수단(토지, 광산, 공장, 교통기관, 기계 등)을 갖도록 함으로서 사회적 생산의 정당한 토대를 부여하고 경제권을 인민 전체에 옮겨놓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급적 대립이 없는 단일성인 민족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서는 농공정책을 병행하여 중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그 경영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며, 농업생산양식을 근대화시켜 잉여 노동력은 공업노동력으로 전환하자고 하였다.³⁵⁾

29) 김병제, 이돈화 외, 「당지」, 위의 책, 93쪽.

30) 위의 글, 90-91쪽.

31) 위의 글, 92쪽.

32) 위의 글, 92쪽.

33) 위의 글, 94쪽.

34) 김병제, 이돈화 외, 「천도교정치이념」, 위의 책, 57쪽.

셋째, 민주문화는 인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를 목표로 한다. 종래의 서당교육이나 출세주의, 이기적인 교육방식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생활을 고도로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교육제도를 사회화하고, 교육기관을 대중화하고, 교육정신을 민주화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기술자의 양성, 노동자와 농민의 교양, 부인의 계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예술에서도 음악이나 문학 등에 남아있는 특권적, 일제적 잔재를 청소하고, 대중생활을 향상시키고 대중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문화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도 천재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학자, 기술자, 발명자를 선출하게 하여 우리 민족과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³⁵⁾

넷째, 민주윤리는 사인여천에 맞는 새 윤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삼강오륜의 계급적 윤리가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평등한 인격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간적 평등과 인간성 평등을 기반을 한 사인여천의 윤리를 수립하고, 이어 진실과 근면, 근기(根氣)에 바탕을 둔 성(誠)과, 경천, 경인, 경물(敬物) 등의 삼경(三敬), 정직과 충실을 갖춘 신(信) 등 성경신(誠敬信)의 덕목을 민족전체의 표준도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천도교의 건국론은 인내천의 중지에 따라 인간이 진화상의 최정점에 있다고 파악하고, 인민을 위한 낙원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족 자주적 이상적 민주 국가의 건설과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신생활(新生活)에 기반한 경제제도의 실현,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에 맞는 새로운 윤리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3. 원불교와 천도교 건국론의 중도주의

1) 원불교 건국론의 중도주의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은 국가 간의 관계나 계급의 대립, 경제 체제 구축 등에서 모두 중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교에서 제시한 중도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즉 원불교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세를 살피고, 계급 간에 화합하고 진화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천도교는 인내천의 중지에 따른 낙원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모순의 타파와 제도개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5) 위의 글, 63쪽.

36) 위의 글, 68쪽.

먼저 원불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선의 현실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불편불의한 조선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불교에서 제시한 대국의 관점은 모두 10가지 항목이다.³⁷⁾ 즉 국제정세를 살피고 연합국의 진의를 알아야 하며, 지식인이나 무식대중, 유산자나 무산자 계급, 각 당파의 현상을 잘 파악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우며, 개인의 명예와 세력, 이해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고, 목전의 이해보다는 대중에 끼치는 영향이나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고, 때를 따라 알맞은 법을 변통하며, 치우치지 않는 법과 마음을 갖게 하자는 것으로, 그리되면 지견(知見)이 밝아져서 건국도 자연히 되고, 생활도 공존공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 간이나 국가, 사회, 개인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 간에 중도주의 노선을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한 태도와 자력의 정신으로서 연합국에 똑같이 대할지언정 자기의 주의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하여 어느 일개 국가에 편부하여 다른 세력을 대항하려는 이 어리석고 비루한 생각은 절대로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정세를 살피건데 중도주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서지 못할 것이며, 연합국의 원조가 아니면 건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³⁸⁾

즉 연합국의 원조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이나 소련에 편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선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적당한 정치가 발견되므로, 문명 각국의 정치방법을 참조하여 가감취사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추구해야지, 내외정세를 달관하지 못하고 어느 한편을 고집하거나 어느 일개 국가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³⁹⁾ 이어 송규는 국내의 정치를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특정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이 아닌 계급간의 권리의 균형을 꾀하는 중도주의를 제시하였다.

중도주의는 과와 불급이 없는 것이니, 즉 상대방에 서로 권리 편중이 없는 동시에 또한 각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잘 운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리는 관리에 대한 권리, 민중은 민중에 대한 권리, 자본주는 자본주에 대한 권리, 노무자는 노무자에 대한 권리가 서로 공평 정직하여 조금도 강압 착취와 횡포를 자행하는 폐단이 없게

37) 『건국론』, 「제2장 정신」.

38) 『건국론』, 「제2장 정신」.

39) 『건국론』, 「제2장 정신」.

하는 법이니, 모든 정책을 이와 같이 사정하는 것을 중도주의라 하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양편에 서로 불안이 없어서 조선 현실에 사실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⁴⁰⁾

중도주의는 과, 불급이 없는 것으로서, 관리는 관리의 권리, 민중은 민중의 권리, 자본주는 자본주의 권리, 노무자는 노무자의 권리를 공평정직하게 하는 것으로서, 좌우의 편중을 막고 좌, 우익 간에 서로 불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원불교의 건국론은 국가 간이나 국내의 정치에 있어서 조선의 현실을 파악하고 중도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산업과 교육에 있어서도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국영과 민영의 조화를 꾀하였는데, 특히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보호함으로서 각자의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데 원불교 중도주의의 특색이 있다. 즉

유산급 처지에 있어서는 과거의 독선주의를 청산하고 공존공영의 정신하에 모든 건 설에 물적 원조를 아끼지 말지며, 무산급 처지에 있어서는 부동하는 마음을 안정하고 정신과 힘을 다하여 각각 산업에 근무하여, 유산자에 대해 공연히 대적하는 생각을 두지 말고 자리 이타의 주의 하에서 한 가지 건설에 협력할 것이며, …… 이와 같이 유산자는 유산자로 무산자는 무산자로, 관리는 관리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각 그 도를 다하고 마음을 합한다면 건국공사는 그 가운데에서 자연히 성립되는 것이다.⁴¹⁾

유산자와 무산자, 관리와 국민 간에 공정한 마음으로 각각 그 도를 다하고, 마음을 합하면 찬다운 건국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송규는 중도주의에 입각하여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즉 계급을 보호함으로써 각자의 안정을 취한 뒤, 유산자의 자발적인 선심으로써 공도기관이 점차 증강되면 국민의 생활이 자연적으로 균형해지며, 공로자의 대우를 분명히 하면 공사 간에 진화의 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⁴²⁾ 결국 원불교의 중도주의는 유산자, 무산자의 계급대립이나 관리, 국민의 관민간의 대립을 막고,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약자가 강자로 가는 길을 제시한 것에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40) 『건국론』, 「제3장 정치」.

41) 『건국론』, 「제8장 결론」.

42) 같은 글.

2) 천도교 건국론의 중도주의

다음은 천도교 건국론의 중도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천도교에서는 미국의 자본주의나 소련의 무산자 독재의 사회주의가 아닌 조선의 현 단계에 적응한 ‘조선적 신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조선의 자주독립과 아울러 조선민족 사회에 맞는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도덕을 추구하는 원리로서 중도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조선은 어디까지 조선민족의 조선인만큼 정치도 우리 힘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 민족 절대 다수가 요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며, 연합국의 원조는 우리의 주권이 손상됨이 없이 자력의 부족을 보충하는 정도로서 민족적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만 한할 것이요, 그 이상의 타력 신뢰, 외세의존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신뢰는 자주가 아니요, 의존은 독립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이 요망하는 정치, 경제, 문화는 연합국의 지도자들보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조선의 평민이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형인 자본가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제도가 내포한 모순과 폐해를 미리부터 잘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련류인 무산자 독재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조선에는 일찍이 자본 계급의 전횡이 없었기 때문이다.⁴³⁾

즉 미국형 자본가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의 무산자 독재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아닌, 조선의 자주독립과 아울러 조선민족 사회에 맞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천도교에서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경중선후의 차별 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민족해방에만 편중하거나 계급해방에 편중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해방을 온전히 완수하려는 것은 거의 없고, 친미반소, 친소반미적인 극단적 경향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조선의 현실은 조선 민중 전체의 염원인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계급해방 즉 민주경제 건설을 통해 자본제도의 모순과 폐해로 인해 장차 동족이 서로 죽이는 혁명의 참극을 제거하고 민주생활의 참된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즉 천도교에서는 민족해방을 통해 국가 간에 평등한 관계와 질서를 수립하고, 민주경제의 실현을 통해서 계급투쟁의 참혹한 경지로 나아가지

43) 김병제, 이돈화 외, 『천도교정치이념』, 위의 책, 51-52쪽.

44) 위의 글, 52-53쪽.

않기 위해 절실한 염원에 따라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천도교에서 파악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즉 소수의 유산자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다수의 무산자는 소외되고 있으며, 시민계급만이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다수의 민중들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천도교에서는 모든 인민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민주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대지주, 자본가 중심의 착취경제를 해소하고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며, 농공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⁴⁵⁾ 당시 10만 명 내외의 대지주와 자산가가 250만 호의 농민을 지배착취 하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⁴⁶⁾ 그 토대 위에 전 민족의 생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신경제 체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또한 천도교에서는 민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자급자족의 농업경제 외에도 국가의 경제력을 충실하게 하기위해서 공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농공병진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의 자급자족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업을 진흥시켜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인데, 이것 또한 농공간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 간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중도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천도교에서는 조선이 농토가 협소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업생산액이 빈약하여 자작자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국제적 통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선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아무리 농업생산력을 발달시키더라도 자급자족하기도 부족하므로 외국에 수출할 수도 없고, 공업 노동자 1인의 생산액은 농민 17인이 생산한 농산액과 맞먹으므로 농업보다는 공업생산에 치중하여 공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제의 착취로 고사해버린 일용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공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도교에서는 공업발전을 위한 방책으로 중요 산업을 국유로 하고, 농업 생산양식을 근대화시키자고 주장하였다. 국유로 하면 자본가적 이윤착취가 방지될 것이고, 농업생산양식이 근대화되면 적은 노동력으로 수확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잉여 노동력을 공업노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경제구조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금까지 생산수단(토지, 광산, 공장, 교통기관, 기계)등과 분리되어 있는 생산력

45) 위의 글, 62-64쪽.

46) 위의 글, 62쪽.

47) 위의 글, 63쪽.

담당자(농민, 노동자, 기술자 등 근로층)에게 생산수단을 법적으로 재분배, 또는 장악하게 하여 사회적 생산의 정당한 토대를 부여하는 동시에 경제권을 소수의 지주, 자본가로부터 인민 전체에 옮겨 놓자는 것이요, 계급적 대립이 없는 단일성인 ‘민족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 그러하고 해서 중소상공업의 자유기업을 금지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개인 사유권을 일절 부인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여 둔다.⁴⁸⁾

라고 하여 생산수단을 인민 전체에게 돌리는 것이며, 자유기업이나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천도교에서 말하는 민주경제는 계급 간의 갈등을 타파하는 경제구조의 실현이며, 국유와 사유를 인정하는 중도주의의 경제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민주경제의 실현은 민주정치와 표리관계를 이루어, 인내천으로서의 개인의 권리와 생활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토대 구축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에 나타난 시민적 공공성

1) 원불교 건국론에 나타난 시민적 공공성

시민적 공공성은 개인이나 특정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위해 작동할 때의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미 하버마스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적 공공성은 공적 영역 내지 공론장, 즉 주체적인 시민의 형성과 공론장에서의 상호 주체성의 존중,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시민적 공공성은 원불교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논의하는 과정과 불법연구회에서 정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먼저 원불교의 시민적 공공성의 요소는 송규가 「건국론」에서 마음의 단결을 강조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송규는 마음속의 10가지 장벽을 극복하고 단결이 이루어진 뒤에 중도와 대의정론, 대동의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⁵⁰⁾

48) 위의 글, 60-61쪽.

49) Habermas, J.,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과주: 나남, 2001), 42-43쪽 및 70-71쪽; 윤형식,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사회와 철학』 4(서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2), 224-226쪽; 양해립, 「시민사회와 공공성」 『동서철학연구』 70(대전: 한국동서철학회, 2013), 385쪽 등 참조.

50) 『건국론』, 「제2장, 정신」.

즉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도출을 위하여 특정한 주의가 아닌 중도주의의 견지에서 명예, 야상, 정권야욕, 시기심, 충동, 지방성과 파벌관념을 타파하여야 하며, 대중들의 올바른 의사수렴을 위해서 대중의 마음을 현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 중도주의에 입각해서 독립이나 애국지사의 충정 등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산 송규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은 박창기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박창기(朴昌基, 1917-1950)⁵¹⁾는 「불법연구회의 정치이념」을 집필하여, 불법연구회 즉 원불교의 정치원리를 제시하여 사회 교화를 담당한 전무출신들의 원만하고 진보적인 정치적 소양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박창기는 불법연구회가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⁵²⁾

1. 진심으로 회원의 복리만을 위하는 대의의 정치
2. 회중 전체를 본위(本位)로 하는 회중 중심(會中中心) 정치
3. 회원들이 자유로이 발표한 총의를 본위한 대중정치
4. 명랑성을 가진 공개정치
5. 회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정치
6. 교육과 산업을 병진하는 교산병진정치
7. 정강을 표시하여 대중의 진로를 명시하는 정치

제1조는 정치의 근본정신은 공심(公心)과 인도정의(人道正義)에 합당한 대의(大義)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2,3,4는 이러한 1조의 대의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6조는 교육과 산업의 병진을 통해 불법연구회의 정치와

1. 각자의 주의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해서 서로 조화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2. 각자의 명예와 야상에 사로잡혀서 사기존인(捨己尊人)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요.
 3. 불같은 정권야욕에 참혹하여 대의정론을 무시하는 것이요.
 4. 그에 따라 시기와 투쟁을 일으키며 간교한 수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것이요.
 5. 사체의 본말을 알지 못하고 일편의 충동에 끌려서 공정한 비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6. 지방성과 파벌관념에 집착하여 대동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7. 남의 세과(細過)를 적발하고 사함과 숙원을 생각하여 널리 포용하는 아량이 없는 것이요.
 8. 사심과 이욕이 앞을 서고, 독립에 대한 정성이 사실 철저하지 못한 것이요.
 9. 그에 따라 진정한 애국지사의 충정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요.
 10. 단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각자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상 말한 바 그 장벽만 타파한다면 단결은 자연히 될 것이다.

51) 박창기(1917-1950)는 본명은 남기(南基), 법호는 묵산(默山), 법훈은 대봉도이다. 1945년 전채동포구호 사업에 참여했고, 원불교의 정치관, 원불교의 교육관을 발표했다.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대사전』(익산: 원불교출판사, 2013), 334쪽.

52) 박창기, 「佛法研究會의 政治理念」 『默山正師文集』(익산: 圓佛敎出版部, 1985), 156-162쪽.

경제를 장구하게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조는 불법연구회에서 정강을 제시하여 대중들을 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중 2조, 3조, 4조 5조에서 제시한 정치원칙이 시민적 공공성의 요소와 상통하여 주목된다.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국가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영역 안에서 개인들이 정치적 공론장을 통해 국가에 미치는 여론을 만드는 공중으로 전환되고, 이 공중을 통하여 여론이 조성된다. 박창기가 주장한 정치이념 역시 회중 전체를 본위로 하는 정치, 자유로이 발표한 총의를 본위로 한 대중정치, 명랑성을 가진 공개정치, 회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정치라고 하였으므로, 양자 간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박창기는 공공성이 실현되어야 할 대상을 개인이 아닌 불법연구회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 국가나 한 단체는 한 사람의 생각이나 한 사람의 힘으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요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대중(大衆)의 생각과 대중의 힘을 가지고 비로소 구성도 되는 것이요 운영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단체 대중의 인심집중(人心執中)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초월하여 신성한 회중(會中)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심을 집중시키려면 그 결과는 개인의 건전한 자유의식의 발달을 저해하여 남의 비위나 잘 맞추는 사람만을 조성하게 되며, 편중한 정치의 원인이 되기 쉽다. 또한 그 대상자가 교체하게 될 때 수습키 어려운 인심혼란상태를 야기하는 원인 외에는 별스런 의의가 없을 것이다.⁵³⁾

사람을 대상으로 인심을 집중하게 되면 개인의 건전한 자유의식의 발달을 저해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인간을 조성하고 편중한 정치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대상자를 교체할 때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중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계위(階位), 연수(年數) 등에 구애되지 않고, 각 방면에 뛰어난 인물들이 회중전체를 이끌게 하자는 것이다.⁵⁴⁾

박창기는 이러한 회중을 대상으로 공공성의 기초단위를 마련한 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정치의 바탕위에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정치와 공개정치를 통한 의사수렴방식을 주장하였다. 박창기는 불법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없는 이상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5는 회원의 평등한 권리와 질적향상을 보장하는 인권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회원 개인을 비교 관찰한다면 남녀나 연령이나 계위(階位)나 지식

53) 앞의 글, 157쪽.

54) 앞의 글, 157쪽.

이나 성격이나 차이가 있을지라도 본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누구나 평등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이 본회를 육성하고 본회를 발전시키려는 이념과 활동에 있어서 이 권리는 누구도 강탈할 수도 없는 것이요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선천적 고정권일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회원에게 대하여 정치적으로 활동하려 할 때 비속한 계급적 사상을 가지고 인권평등을 무시하거나 유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⁵⁵⁾

불법연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회원들이 누구나 평등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회에 관련된 이념과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강탈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선천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창기는 회중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권자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계급적 사상에 의해 평등한 회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특히 여자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주장하더라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⁵⁶⁾

또한 박창기는 사안을 엄폐시키지 않고 공개하는 정치를 주장하였다.

제4는 명랑성을 가진 공개정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인지(人智)가 우매한 시대에 상용하던 “백성은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알게 할 수는 없다(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⁵⁷⁾”는 식의 엄폐식 정치는 현대에 있어서 되도록 하루 빨리 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만일 일체를 엄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와 같은 수단은 수단 중에도 가장 저열한 수단으로써 일시는 무사히 넘어갈지라도 미구에 역효과를 발생케 하며 더욱이 인심의 명랑성(明朗性)과 사건의 공정성(公正性)을 상실하는 외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을 것이다.⁵⁸⁾

과거와는 달리 현대는 엄폐식의 정치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사건을 공개하여 인심을 명랑하게 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주장한 것이다. 박창기는 이러한 사건의 공개와 함께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의 공화정치의 원리에 따라 회원들의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가 고루 깨여가는 현대에 있어서는 되도록 민의를 존중하는 대중정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근본적 기초로써 회원에게 언론에 대한 자유를 절대

55) 앞의 글, 159-160쪽.

56) 앞의 글, 159-160쪽.

57) 『논어집주(論語集註)』권8, 태백(泰伯)9장(서울: 보경문화사, 1992)

58) 박창기, 위의 글, 159쪽.

보장하고, 어느 방법으로든지 회원들의 소리를 널리 들어볼 용의와 성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더욱이 회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의사를 기탄없이 말하도록 만든 연후에 그 중인(衆人)의 소리와 중인(衆人)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장 자유활달하고 가장 진보적인 대중정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⁵⁹⁾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회원들이 기탄없이 발언을 하게 하여, 중인(衆人)의 소리와 중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론장을 마련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활달하고 진보적인 대중정치를 실현하자고 한 것이다

이러한 박창기의 대중 민주주의 정치 원리는 비록 불법연구회에 한정된 것이라 할 지라도 그 원리와 방법에 있어서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근본정신과 대화의 원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시민으로서의 주체의 인정과 서로 간의 인격의 존중,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해 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적 공공성의 원리를 참되게 구현할 수 있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2) 천도교의 건국론에 나타난 시민적 공공성

천도교의 건국론에서는 시민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과 인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였다. 천도교에서는 먼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13가지 항목에 걸쳐 규정하여, 법률상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서 정치·경제·문화·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만 20세 이상은 평등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향유한다는 것, 신체, 거주, 서신 비밀을 지키는 자유, 사유재산과 육체적·정신적 노동력의 보호, 청원·소원·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구속할 수 없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⁶⁰⁾

이어 천도교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민의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중앙, 지방을 통하여 입법기관에서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인민의 공무를 대행하는 행정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인민의 양심적 명령을 실현시키는 사법관이냐를 막론하고 다같이 인민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59) 앞의 글, 158-158쪽.

60) 김병제, 이돈화 외, 「천도교정치이념」, 위의 책, 56-57쪽.

에 의해 이를 선출하는 동시에 그들의 실제 행동이 인민의 본의에 월권하는 경우는 파면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서야 비로소 인민은 진정한 통치의 주권자가 되고 관리는 진정한 인민의 공복이 될 것이요, 그렇게 하는데서야 진실로 인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경제를 건설하고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또는 그렇게 하는 데서야 비로소 다수가 소수의 무리한 지배와 압박을 받지 아니하며, 선이 악에게 억울한 굴종을 당하는 상황을 면하게 될 것이다.⁶¹⁾

누구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담당자를 선거하고 파면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천도교에서는 이러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건적 제관계의 청산과 식민지적 성격의 제거, 반동적 파쇼와 함께 근로 대중이 영도적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²⁾

첫째, 봉건적 제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로는 봉건적 유제인 토지관계와 특권유습, 남녀 간의 불평등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청산해야 비로소 민주주의적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식민지적 성격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재 조선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근로대중을 노예화하는 제국주의적 요소가 다분하여 조선의 토착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지주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국주의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반동적 파쇼를 타도해야 하는 이유로는, 파시즘은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인류문화를 파괴하는 적인데, 국내의 지주나 토착자본이 파쇼화할 우려가 있고, 친일관료와 협력자 역시 조선의 애국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쇼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민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위력으로서 반동적 파쇼를 타도함으로써,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근로대중이 영도적 세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조선은 산업자본이 자주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제국주의 자본과 토착지주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8할 이상이 되는 근로대중의 해방이 없이는 진정한 민족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대중의 역량을 집결하여 정치적 중심세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도교에서는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민이 주체가 되는 길

61) 위의 글, 57쪽.

62) 위의 글, 59-60쪽.

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천도교 역시 개인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였다. 민주 국가 건설을 위해 인민 전체가 정치 훈련과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³⁾ 훈련에 있어서는 먼저 주체가 되는 인생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생에 있어서 소아(小我=肉體我)가 아닌 대아(大我=人生本質)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⁴⁾ 대아는 내적충동에 움직이는 자신과는 달리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서, 유한한 자아가 무한해지고 상존항구의 무궁아(無窮我)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천도교의 사명인 포덕천하, 광제창생이라는 것이다.⁶⁵⁾

결론적으로 원불교는 유산자와 무산자, 유식자와 무식자 간의 대립이 아니라 상호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하려고 하였던 것에 비해, 천도교에서는 지주나 자본가 등이 봉건적이고 제국주의적 잔재로 인식함으로써 참된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봉건적 관계나 식민지적 성격, 반동적 파쇼를 타파하고 근로대중이 영도세력이 됨으로써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어 참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에 나타난 중도주의, 시민적 공공성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정산 송규에 의해 마련된 원불교의 건국론은 건국사업에 필요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어 정치, 교육, 국방, 건설과 경제의 방책을 제시하고, 최후로 진화의 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열악한 민중의 정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분야에 뛰어난 자를 우대하고 세습법을 철폐하여 약자(弱者)에서 강자(强者)가 되는 진화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마음을 살피는 중도주의와 미국이나 소련 등 국가 간이나 관리와 민중, 자본가와 무산자 등이 중도주의의 입장에서 좌익, 우익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천도교는 인내천의 종지에 따라 인간이 진화상의 최정점에 있다고 파악하여, 낙원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민족개벽과 사회개벽을 주장하였다. 민족 자주주의 이상적 민주국가의 건설과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신생활(新生活)에 기반한 경제제도의 실

63) 김병제, 이돈화 외, 「당지」, 위의 책, 101쪽.

64) 위의 글, 130-131쪽.

65) 위의 글, 130-131쪽.

현,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에 맞는 새로운 윤리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천도교 역시 미국이나 소련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거나 좌, 우익에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중도주의 입장에서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도덕이 실현되는 신민주주의의 국가건설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원불교와 천도교에서는 시민적 공공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불교에서는 상호 간에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폐단을 제시하여, 시민적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 조건을 제시하였고, 박창기는 회중을 대상으로 공공성의 기초단위를 마련한 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정치의 바탕위에 여론을 중시하는 대중정치와 공개정치를 통한 의사수렴방식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창기의 주장은 회원 간의 주체의 인정과 서로간의 인격의 존중,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해 간다고 하는 시민적 공공성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천도교에서는 사인여천의 윤리, 인간지상의 도덕, 평등자유의 제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천도교에서는 누구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실제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길을 제시하였다. 인민들이 선거권과 파면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천도교에서는 봉건적 제관계, 식민지적 성격, 반동적 파쇼 등을 타파하여야 개인, 사회, 국가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제거하고 동귀일체적 민주, 평등, 평화, 자유의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두 종교 간의 시민적 공공성의 차이는 원불교는 중도주의에 입각한 상호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 훈련이나 공도자(公道者) 중시와 같은 약자가 강자되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에 비해, 천도교는 인내천(人乃天)의 종지(宗旨)에 따라 개인의 자유,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정치제도와 사회, 경제, 문화 방면에 대한 개혁과 불합리한 측면을 제거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불교와 천도교의 건국론은 좌, 우익의 극심한 대립과 남과 북에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이한 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중도주의, 시민적 공공성을 표방한 주장들이 점차 용납되지 못하고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념장벽이 철폐되어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가 늘어나고,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원불교와 천도교에서 제시한 건국론 역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불교에서 주장한 중도주의 입장에서 계급 간에 화합을 꾀하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공론을 중시한 것은 오늘날 민족통일과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계층이나 계급간의 화해, 상호소통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천도교에서 계급대립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어 불합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

였던 것은 오늘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모순의 분석과 타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본고는 건국론 자체에 주목을 하였기 때문에, 건국론을 제시한 뒤 원불교와 천도교에서 전개한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운동 등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이들 종교의 건국론이 해방정국과 국가건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후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종교에서도 해방 이후 수행한 각종 정치, 사회운동과 함께 아울러 추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論語集註』, 서울: 보경문화사, 1992.
- 先進文集編纂委員會 編, 『主山宗師文集』,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0.
- 先進文集編纂委員會 編, 『默山正師文集』,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5.
- 정산종사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 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8.
- Habermas, J.,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파주: 나남출판, 2001.
-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편, 『천도교약사』,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6.
-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불교대사전』, 익산: 원불교출판사, 2013.
- 김병제, 이돈화 외, 『천도교의 정치이념』, 『동학네오클래식』 12,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
-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전재동포구호사업의 재조명 I」 『원보』 32(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89)
- 류병덕, 「소태산이 본 종교와 정치의 상관성」 『원불교사상』 2(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 임형진, 「東學과 天道敎 靑友黨의 民族主義研究」(경희대박사학위논문, 1998)
- 김도중, 「정산종사의 정치철학」, 『평화통일과 정산종사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8.
- 양은용, 「정산종사의 저술과 관련연구 분석」, 『평화통일과 정산종사건국론』,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8.
- 신순철, 「건국론의 저술 배경과 성격」 『圓佛敎學』 4(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9)

- 김영두, 「정산 송규종사의 『건국론』과 삼동윤리」 『圓佛敎學』 4(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9)
- 윤형식,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사회와 철학』 4(서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2)
- 장석흥, 「해방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 25(서울: 한국 근현대사학회, 2003)
- 오문환, 「의암 손병희의 ‘교정쌍전’의 국가건설 사상 : 문명계몽, 민회운동, 3. 1 독립운동」 『정치사상연구』 10-2(서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 박광수, 「원불교 사회참여운동의 전개양상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0(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 정용서, 「해방후 천도교세력의 정치운동」(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10)
- 이진수, 「소태산의 정교동심관(政敎同心觀)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6(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1)
- 원영상, 「광복 후 분단체제에 대한 원불교의 대응과정 연구」 『신종교연구』 28(오산: 한국신종교학회, 2013)
- 양해립, 「시민사회와 공공성」 『동서철학연구』 70(대전: 한국동서철학회, 2013)
- 이성전, 「정산의 치교사상-정치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9(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원고접수일: 2019년 6월 23일 심사일: 2019년 7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20일

연구자 소개: 김봉곤

- ① 전공: 조선후기 사회사상사 / 소속과 직위: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교수
 - ② 관심영역: 근현대유학사상사, 근대한국종교(동학, 천도교, 대종교, 증산종교, 원불교)
 - ③ 주요논저: 『섬진강 누정산책』(공저), 『필암서원』(공저), 『하동유학자 조성가가 기록한 동학농민혁명』(편역서), 「19세기 후반 고창지역 유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호남지역의 파리장서운동」, 「대종교의 종교성과 공공성 연구」, 「근대한국종교의 공공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 ④ E-mail: kimbong21@hanmail.net
-

Abstract

Centrism and Civil Publicness in Theory of Nation-Founding of
Won Buddhism and Cheondogyo

Kim, Bonggon

Wonkwang University Won Buddhism Thought Researcher

This study was written to examine the Centrism and Civil Publicness in Theory of Nation-Founding of Won Buddhism and Cheondogyo. Today, there is a strong link betwee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the civil movement, which are active in Won Buddhism and Chondogyo, at the time.

The purpose of the nation-founding theory of Won Buddhism prepared by Jungsan Songkyu is to develop national power by taking the root as a spirit, the stem as politics and education and the branches and leaves as national defense, construction and economy and obtaining the result as the road of evolution. The nation-founding theory of Won Buddhism is characterized by its emphasis on centralism, training thought, and the way of evolution. It politically blocked the bias of the left and the right through democratic republicanism and diplomatically chose a neutralist diplomatic route that did not deviate to either the US or the Soviet Union and made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united by nationalizing important industries and privatizing medium and small industries. He also argued that politics and religion should focus on training for mental control and conscience cultivation through parallel leading to improve the spirit level of the Joseon people. He especially proposed a path of evolution from the weak to the strong by favoring the superior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oral fields and eliminating the succession law.

In contrast, Cheondogyo emphasized the spiritual opening, the national opening, and the social opening according to the main purport of Innaecheon (Within the human you will find God). In the nation-founding theory, the emphasis was on the national opening and the social opening. Cheondogyo aimed to build up an ideal democratic state of national independence, realize an economic system based on a new life of Donggwilche (Everything is Back to One) and establish new ethics suitable for the spirit of Sainyecheon (Serve man like heaven). Cheondogyo was also wary of unilateral bias toward the US or the Soviet Union or being biased toward the

left and right and was to realize the construction of a nation of neo- democracy where democratic politics, democratic economy, democratic culture and democratic morality are realized from a standpoint of centralism.

It is noteworthy that Won Buddhism or Chondogyo suggests a plan of civic publicness in addition to suggesting centrism i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civil society formation. Presenting the negative effect that prevents the mutual rational communication, Won Buddhism argued that we should respect the personality of others for correct collection of views and have a discussion according to justification based on centrism. Especially following the theory of nation founding, Park Chang-gi claimed human rights politics that respects the rights of members, audience-centered not individuals, members' free expression of opinions, collective opinions and public politics in the political ideology of Buddhism research society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ivic publicness that forms public opinion in a reasonable manner through respect for each other's personality, discussions with different opinions.

In contrast, Chondogyo tried to establish the ethics of Sainyeocheon (Serving man like heaven), morality for human's sake and a system of equality and freedom through the spiritual evolution of humans standing at the top i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purport of Innaecheon (Within the human you will find God). Therefore, Chondogyo presented the way for citizens to become sovereigns by asserting that everyone should have the right to elect and dismiss legislators, judges, and administrators to enjoy the rights of freedom and equality. In addition, Chondogyo tried to eliminate unequal relations among individuals, society and countries by liquidating feudal relationships, removing colonial personality and breaking down reactionary fascism such as pro-Japanese capitalists and landowners and said that we can pursue the true happiness of democracy, equality, peace and freedom of Donggwilche (Everything is Back to One) after eliminating these inequalities.

In Won Buddhism,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civil society movement to emphasize mutual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in order to harmonize the class, break down the barriers of the mind, and to emphasize mutual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In addition, the rescue of the class confrontation in the Chondogyo, and the pursuit of institutional reforms of the unreasonabl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s the sovereign of the people, can give many implications to the realization of the real democracy today.

Key words: Won Buddhism, Cheondogyo, Theory of Nation-Founding, Centrism, Civil Publicness the mutual rational communication, *Innaecheon*